

獨逸의 經濟學研究와 教育

朴 興 基*

<目 次>

I. 머리말
II. 經濟學과 經濟理論
III. 獨逸經濟學의 發展過程
IV. 研究와 教育現況
V. 맺음말

I. 머리말

인류의 역사와 함께 「경제문제」도 항상 같이 존재해 왔겠지만 이른바 「경제학」이 체계적으로 성립된 이후 200여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통설이다. 비교적 짧은 기간을 지나오면서도 그 발전은 눈부신 바가 있어서, 19세기 초엽에는 이미 자연과학의 명성에匹敵하기도 하였고 [Friedman (1971, pp.23-47 특히 p.24의 각주 3)] 오늘날에는 「경제학 제국주의」(the imperialism of economics)가 云謂될 정도로 탁월한 학문분야로 성숙하였다고 한다[Kindleberger (1986, p.1)].

이러한 발전의 뒷면에는 경제학적 이론의 時空을 초월한 보편타당성을 주장했던 뛰어난 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1) 세계적 관점에서 대체로 경제학의 主流를 형성해 왔던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경제학과 자연과학 사이에는 단지 발전과정의 長短에 기인한 성숙도의 차이가 있을 뿐 탐구의 방법이나 목표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경제이론의 局地性은 당연히 부정된다.

그러나 경제이론의 국지성을 부정하는 견해를 부정하는 또다른 견해도 꾸준히 있어 왔다. 부정의 이유는 간단하다. 시공을 초월하여 보편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이론은 역사적 그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敎授

(1) 예를 들자면 "... we are careful not to import into it[political economy] the conception of a national unity in the economic field which does not exist in reality." [Wicksell (1967, p.2)]; "But a discipline like economics has a logic and validity of its own," [Samuelson (1962, p.18)].

리고 사회적으로 제약받고 있는 현실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단지 현실관련성이 없는 개념들의 모순없는 구성체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란 것이다[Knapp (1984, pp.34-52 특히 pp.38-9); Albert (1963, pp.45-76); Hutchison (1972, pp.191-202)]. 경제학이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경제정책상의 필요에 의해 발전되어 온 학문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경제학적인 노력의 결과가 경제이론이라면, 경제이론은 경제학적인 노력을 傾注케한 문제의식의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현실」에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문제의식중에 특정한 국가나 민족의 이해관계가 용해되어 있을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경제이론도 민족주의적 성격을 갖는다는 주장이 꾸준히 있어 왔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Myrdal (1969); Robinson (1962); Gareau (1985, pp.1-169)].

이외에도 경제이론의 위기는 도처에서 논의되고 있다.⁽²⁾ 특히 경제학적 탐구의 대상 그리고 경제학의 문제 또는 경제학자들의 과제가 무엇인지 성찰하기 위해 方法論에 다시 한번 관심을 기울일 것이 주장되기도 한다.⁽³⁾ 어떤 학문에 대한 방법론적 관심의 증대는 그 학문이 병들어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도 있다.⁽⁴⁾ 그러나 방법론적 성찰만으로 주어진 문제들이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 지혜가 결여된 이론들의 치유를 위해 좋은 기회가 마련될 수는 있다고 생각된다.

독일 또는 독일어권내에서의 경제학의 발달과정은 바로 그러한 방법론적 논쟁으로 點綴되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만큼 독일내에서의 경제학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해 一目瞭然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보는 관점과 서있는 입장에 따라 다양한 決算書가 제출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과도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독일경제학의 경향적 특징을 첫째, 개별성보다는 全體性(Totalität)의 강조 둘째, 현실에 대한 집착(Drang zur Wirklichkeit) 그리고 셋째, 경험적·분석적 방법보다는 역사적·해석학적 방법(historisch-hermeneutische Methode)의 선호 등으로 요약해 보고자 한다.

한 나라의 학문적 성격은 다른 나라의 그것과 비교될 때에만 그 특징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독일경제학의 위와 같은 특징은 전통적으로 독일의 대학이 다른 나라의 대학과 비교되

(2)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Bell and Kristol (1981, p.xii)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Economic theory, if it is to be viable, must propose rational solutions to problems. And for that reason, theory cannot exist without practical wisdom."

(3) Buchanan (1979, p.37)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Concentration on methodology won't solve any of the problems for you, but at least you should know what the problems are."

(4) Eucken (1940, p.Ⅷ)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Emporwuchern methodologischer Reflexionen ist ein Krankheitszeichen für jede Wissenschaft; aber durch Methodologie allein ist noch nie eine kranke Wissenschaft geheilt worden."

있을 때 보여주는 일반적 학문연구의 방법론적 특성과 대체로 일치한다. 일찍부터 유럽의 대학들은 언어권에 따라 도식적 일반화이긴 해도 相異한 방법론적 특성들을 보여왔다. 라틴계열의 대학들이 合理的 思考와 계량적 접근을 편애하고 영국의 대학에서는 실제적·경험적 관점이 증시된 반면, 독일의 대학에서는 관념론적 경향의 철학에 傾倒된 학문풍토가 지배적이었다[Theo Surányi-Unger (1965, pp. 21-37 특히 p. 21)]. 이와 같은 경향은 경제학의 연구와 교육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독일의 경우 위에서 지적한 특징들로 나타났으며 그것은 다시 이른바 歷史學派(Historische Schule)를 통해 가장 잘 구체화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이 독일경제학의 전체를 빠짐없이 포괄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위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논쟁이 잦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논의의 체계적 전개를 위해 경제학의 일반적 발전과정과 경제이론의 골격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II. 經濟學과 經濟理論

경제학은 근대국가의 성립이후에 국민경제(Volkswirtschaf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로소 생성·발전된,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인간의 행위를 탐구하는 학문분야라고 할 수 있다. 중세의 신분적 지배질서와 전통적 행위규범이 계몽사상과 자연법 그리고 합리주의와 개인주의정신에 의해 붕괴되면서 등장한 자유주의사상과 함께, 경제가 사회생활의 다른 영역 즉 정치와 종교 그리고 윤리와 문화로부터 점차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게 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경제학은 탄생하였다[Schmölders (1961, p13); Koslowski (1986, pp. 15-21)]. 그러나 처음부터 잘 규정된 연구대상과 방법을 갖춘 독자적 학문분야로 출발한 것은 아니었다. 대체로 경제학은 다음과 같은 세 분야 즉 첫째로, 국가학과 법학 둘째로, 역사학 그리고 끝으로 실천철학 즉 윤리학(moral philosophy)의 품속에서 발육을 시작하였다.⁽⁵⁾ 따라서 경제학도 정신과학(Geisteswissenschaften)⁽⁶⁾의 일종이라는 견해가 학계의 일각에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경제학을 정신과학보다는 자연과학(Naturwissenschaften)에 가까운 학문분야로 보

(5) 바로 이러한 이유로 특히 독일대학에서의 경제학부의 위치와 소속이 아직까지도 분명치 못한 경우가 많다. Jochimsen und Knobel (1971, pp.11-66 특히 p.13) 참조.

(6) Geisteswissenschaft라는 개념은 19세기 중엽 독일에서, J.S. Mill이 사용한 "the moral sciences"라는 말을 번역하기 위해 W. Dilthey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정확한 개념정의가 어려우나 대체로 사회과학 뿐만 아니라 인문과학까지 포괄하는, 자연과학과 대비되는 광의의 개념으로 쓰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Rickman (1967, pp.275-9) 참조.

려는 견해도 적지 않았고 이러한 견해가 점차 경제학의 主流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경제학에서 물리학 특히 古典的 力學에서 빌려온 調整, 均衡, 機制(mechanism) 등의 개념들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쓰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Preiser (1975, pp. 22-5)]. 결국 경제학은 처음부터 자연(Natur)에서 정신(Geist)에 이르는 광범위한 대상을 그 탐구 영역으로 삼고 태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태어난 경제학이 지금까지 발전해 오며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가장 큰 문제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가 스미드(Adam Smith, 1723~1790)의 문제로서 그것은 수많은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분업을 통해 짜여져 있는 국민경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로는 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가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분배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세째는 케인즈(J.M. Keynes, 1883~1946)의 문제로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의 조건에 관한 것이다[Preiser (1979, pp. 1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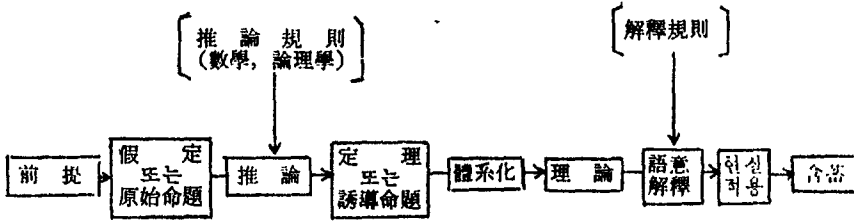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들은 쉽게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경제학의 發達史는 相異한 해결방법을 둘러싼 論爭史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의 큰 논쟁으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꼽는다.⁽⁷⁾ 첫째가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이다. 마르크스는 고전경제학이 추구하던 분석적 방법을 통한 경제현상의 설명(erklären)에 만족하지 않고 소위 변증법적 방법을 써서 도달한 역사발전법칙에 따라 사회의 개혁(verändern)을 주장하였다. 둘째는 슈몰러(Gustav von Schmoller, 1838~1917)와 멩거(Carl Menger, 1840~1921) 사이에 1883년에 시작된 「방법론논쟁」(Methodenstreit)이다. 세째는 금세기 초 베버(Max Weber, 1864~1920)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가치판단논쟁」(Werturteilsstreit)으로서 이것은 戰後「실증주의논쟁」(Positivismusstreit)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네째로 들 수 있는 것이 케인즈를 둘러싼 가장 최근의 논쟁이다.⁽⁸⁾

이러한 논쟁들이 경제학의 발전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특정한 公理나 理論 또는 技法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과학으로서의 경제학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는 데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케인즈를 둘러싼 가장 최근의 논쟁 이외에는, 모두가 독일어권 내에 그 논쟁의 震源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치판단논쟁 등에 휩쓸린 적도 없이⁽⁹⁾

(7)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대체로 Jochimsen und Knobel (1971, pp. 17-42)의 내용에 따랐다.

(8) 네 가지 논쟁들에 관한 참고문헌들은 Jochimsen und Knobel (1971, pp. 381-9)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9) Robinson (1962, p. 72)의 다음 문장 참조: "It is true that in Cambridge we had never been taught that economics should be *wertfrei* or that the positive and the normative can be sharply divided. We knew that the search was for fruit as well as light."



<그림 1> 理論의 짜임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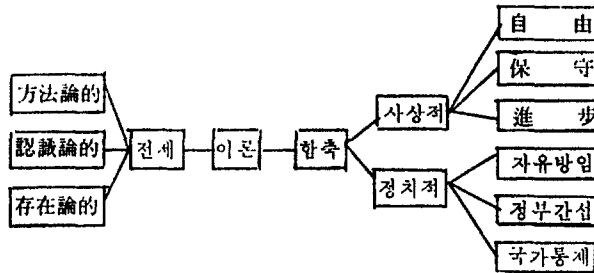
독일경제학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 즉 나치(Nationalsozialismus)시대에, 영국에서 자유분방한 논리를 전개한 케인즈의 업적을 혁명으로까지 평가하는 이유로 고전적 자유방임경제학자들이 잊고 있었던 倫理와 時間을 경제이론에 다시 도입시킨 공로가 지적되고 있다 [Robinson (1962, pp. 71-4)]. 윤리와 시간의 강조는 理論과 歷史의 만남을 뜻하고 이점은 바로 방법론논쟁과 가치판단논쟁을 거치며 독일의 역사학파들이 주장했던 내용과 흡사하다.

그렇다면 과연 이론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론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비해 이론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묻고 또 대답하는 사람은 드물다⁽¹⁰⁾. 이론은 우선 학문적 탐구의 최종적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학문 또는 과학의 궁극적 목표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적 구조물을 창출해 내는 데 있다고도 할 수 있다[Nagel (1972, pp. 67-85 특히 p. 84); Friedman (1971, p. 26)]. 이때 이론적 구조물이란 긴밀히 논리적으로 연관된 命題들의 의미 있는 集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종합적으로 도식화해보면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假定들로부터 推論을 거쳐 定理(theorem)가 유도되고 유도된 정리들의 체계적 집합이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론에 내포되어 있는 개념들이 현실을 반영하도록 해석하는 절차를 거쳐 이론의 현실타당성이 어느정도 인정되면 이 이론은 실제적 含蓄(implication)을 갖게 된다.

전제와 함축을 제외한 이론의 짜임새는 論者에 따라 형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체로 같다.⁽¹¹⁾ 따라서 이론을 둘러싼 논쟁은 전제와 함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제(presupposition)는 이론의 정립과정에서 제기되고 해결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변이라고 볼 수 있다. 함축은 이론이 현실과의 대화에서 초래할 수 있는 실제로 가능한 思想的(ideological) 내지

(10) Homans (1967, p. 22)의 다음 문장참조: "No 'big' word is more often used in social science than the word theory. Yet how seldom do we ask our students—or, more significantly, ourselves—what a theory is."

(11) 이론의 짜임새에 관한 짧고 명확한 서술은 Massey (1965, pp. 1155-64) 참조. 이 글에서는 물론 실증과학의 이론을 다루고 있다.



<그림 2> 前提와含蓄

는 政治的 結果를 지칭한다. 이를 좀 더 부연하면 <그림 2>와 같다. (12)

사회과학을 이론적으로 접근하면서 제기하여야 할 첫번째 질문은 방법론적 문제(methodological problem)에 관한 것이다. 방법론적 문제의 핵심은 사회과학 또는 경제학이 총체적 과학체계내에서 독자적으로 담당하여야 할 구역을 찾는 일이다. 이 문제를 한단계 더 구체화시키면 무엇보다도 경제학이 자연과학적 의미에서의 과학인가 아니면 人間學(humanities)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경제학이 기본적으로 자연과학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연주의(naturalism)적 전제를 택하게 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反自然主義(anti-naturalism)의 전제에서 출발하게 된다.

방법론적 문제에 이어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두번째 문제는 인식론적 문제(epistemological problem)이다. 이 문제는 다시 좀 더 구체화시켜 이론의 機能과 構造에 관한 질문으로 바뀌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론의 기능 또는 이론구축의 최종목표를 현실의 적절한 설명과 지식의 축적에서 찾는 사람들은 認知主義(cognitivism)의 전제를 인정한다. 이에 반하여 이론의 실천적이고 행동유발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行動主義(activism)의 전제를 신봉한다. 前者가 이론에 오직 斷言的 命題만을 허용하는 반면에 後者는 이론에서 오히려 규범적이고 처방적인 조언을 구한다. 이론의 구조적 측면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이론이 허용하거나 금지시켜야 할 명제의 형태에 관련된 것이다. 이것은 다시 과학적 탐구와 價値判斷과의 관계로 바뀌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탐구의 과정과 그 결과로서의 이론이 완전히 객관적이고 일체의 가치판단으로부터 자유스러울 것을 요구한다. 이들의 이론의 구조에 대한 인식론적 태도는 中立主義(neutralism)의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반면에 가치판단을 경제학적 탐구의 필수적 전제조건으로 보며 또한 경제학 이론의 기본적 내용으로 파악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들은 價値主義(axiology)의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말

(12) <그림 2>의 내용과 본문 해당부분의 서술내용은 주로 Brodbeck (1968), Topitsch (1979), Sztompka (1979)를 참조하였다.

할 수 있다.

세번째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경제학적 탐구의 대상들이 갖는 存在論的인 性格(ontological properties)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경제적 사실」의 내용과 포괄범위를 확정짓는 데 있다. 이 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회의 기본적 구성인자로서의 인간 즉 개인의 본질과 하나의 실체로서의 사회의 본질에 관한 질문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우선 개인은 主體인(主體人)이 아니면 또 다른 실체의 영향하에 존재하는 客體인(客體人)을 밝혀야 한다. 개인을 어떠한 형태의 외부적 영향에 의해 구조되고 이미 결정된 존재로 파악하는 사람들은 受動主義(passivism)的 전제로부터 출발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반해 개인을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내부지향적이고 자치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自律主義(autonomism)的 전제를 따른다. 두번째 질문은 사회의 기본적 속성에 관련된다. 사회를 단순히 개인들 및 개인들의 행위의 집합체로 보는 사람들은 個人主義(individualism)的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에 반해 일부의 사람들은 사회를 일종의 超個人的인 독자적 존재로 파악한다. 이들은 전체로서의 사회에만 관련된 특수한 규칙성이 있다고 믿으며 따라서 사회전체에만 고유한 속성을 인정한다. 그리고 集合主義(collectivism)的 전제가 이들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학 이론들은 다양한 전제들로부터 출발하여 정립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이론들이 그들의 이론적 전제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론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그 내용속에 묵시적으로 신봉되고 있는 전제들을 유추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림 2>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다양한 방법론적, 인식론적 그리고 존재론적 전제들은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함축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떠한 이론이든 그것은 시대의 산물이다. 사회속에 일정기간 존속되어 내려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이 생성되고 비판되며 이용되거나 폐기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론이 발전되며 따라서 사회의 모든 현실이 이론의 성숙과 깊은 관련을 갖게 된다. 이론의 객관성이 이론의 존재이유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이러한 이론의 객관성이 비판하는 방법의 객관성에 의존한다면, 학자들의 경쟁뿐만 아니라 전통과 사회제도 그리고 비판에 대한 관용의 폭 등도 쓸모있는 이론의 생성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Popper (1969, 103-23 특히 p. 106 및 pp. 112-3)].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경제학의 연구와 교육이 고찰될 필요가 있다.

III. 獨逸經濟學의 發展過程

위에서 이미 독일경제학은 관념철학이 지배적인 학문풍토속에서 역사적·해석학적 방법을 바탕으로 전체성과 현실성을 강조하며 발전해 왔다고 서술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대체로 19세기 중엽이후 반세기 가량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고 다른 시기에는 별다른 특징이 없었거나 잦은 논쟁의 여파로 방법론적인 혼란속에서 방황하기도 하였지만 독일경제학 연구와 교육(Forschung und Lehre)의 상대적 특성을 표현한 것임에는 틀림없다.⁽¹³⁾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였겠지만 특히 독일어권내에서의 연구와 교육의 밀접한 상호관계 즉 「연구를 통한 교육」과 「교육을 통한 연구」의 전통은 오래된 것이다.⁽¹⁴⁾ 연구와 교육은 주로 대학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독일에서의 경제학의 발전과정은 대학에서의 경제학연구와 그 교육의 발전과정과 다름이 없다.

1. 官房學(Kameralismus)의 傳統

중세의 대학은 神學과 哲學, 自然科學과 醫學 및 오래된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法學 등이 지배하고 있었다. 경제는 상대적으로 賤한 것으로서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근대국가의 성립 이후에 경제가 권력의 신장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이 인식된 다음부터였다. 이 때가 초기중상주의(Frühmerkantilismus) 시대에 해당되지만 경제에 관한 단편적 지식의 축적에 그쳐 경제학이라고 이룰만한 체계적 학문분야는 성립되지 못하였다. 비교적 포괄적으로 체계화된 경제학의 시작은 따라서 관방학의 등장과 매를 같이 한다고 여겨져 왔다[Winkel (1982, pp. 413-25 특히 pp. 413-4); Schmolders (1982, pp. 425-46 특히 p. 426)]. 그러나 초기관방학자들에게도 대학에서의 강의는 허용되지 않았다.

할레대학(Universität Halle)의 法學部에 경제학강좌가 최초로 개설된 것은 1727년이였다. 곧 이어 같은 해에 프랑크푸르트(Frankfurt/Oder)에 유사한 강좌가 개설되면서 여러 대학으로 확산되었고 지역에 따라서는 관방학교육을 위한 특수한 아카데미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18세기 말경 36개 대학의 법학부나 철학부 또는 국가학부에 경제학강좌가 개설된 곳은 23개

(13) 여기에 관해서는 Eucken (1959, pp. 191-5)에 실려 있는 F.A. Lutz, "Walter Euckens Beitrag zur Nationalökonomie—Die Idee der Wirtschaftsordnung" 참조. 이 글은 Walter Eucken을 중심으로 독일경제학의 발전과정을 짧고 특징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

(14.) Surányi-Unger (1965, p. 22)의 다음 글 참조: "Die Entwicklung von Forschung und Lehre im deutschen Sprachbereich ist durch eine besonders enge gegenseitige Befruchtung gekennzeichnet, die vom 'Verein für Sozialpolitik' nach wie vor kräftig gefördert wird."

대학에 이르렀다[Winkel (1982, p.414)]. 4 내지 8학기 동안 계속되는 학습기간에 경제와 사회, 제정학과 행정학, 농학 등의 자연과학 그리고 기술 및 경영학 등 광범한 교재가 강의되었다. 교육목적은 주로 국가의 행정업무중 법학과 출신으로 처리될 수 없는 영역을 담당할 관료들을 양성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영역이 점차 많아지면서 경제학교육은 18세기 중엽 이후 하나의 새로운 유행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간에 비해 너무도 다양한 과목이 이수되어야 했기 때문에 정작 경제학에 관한 학습은 흔히 1학기에 지나지 않았고 이것은 그동안 축적된 경제학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크게 부족한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경제학의 자립과 세분화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기 시작하였다.

2. 國民經濟學으로의 發展

18세기 말엽경 영국과 불란서로부터 자유주의사상이 독일에 流入되고 특히 영국의 고전 경제학이 소개되면서 관방학적 교육실태에 대한 自省의 소리가 더욱 커졌다. 생산요소와 생산과정, 기업과 경쟁 그리고 자유무역 등의 문제는 행정관료의 육성을 위한 관방학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그렇다고 관방학적 교육이 바로 止拂되지는 않았지만 경제학이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사실이었다. 19세기에 들어와 국민경제학(Nationalökonomie 또는 Volkswirtschaftslehre)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하면서⁽¹⁵⁾ 경제학은 점차 관방학이 포괄하고 있던 윤리적 규범과 자연과학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였고 응용철학의 일종으로 여겨져 대부분 대학의 철학부에 자리잡게 되었다.

독자적 경제학부 또는 국가학부의 설립은 널리 확산되지 못하였다. 리스트(Friedrich List, 1789~1846)에 의해 튀빙겐대학에 1817년 국가경제학부(Staatwirtschaftliche Fakultät)가 창설된 이래 모두 3대학에서만 이의 실현을 보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경제학부가 철학부 혹은 법학부와 결합된 채 금세기까지 존속해 왔다. 그리고 철학부와 결합된 경제학부에서는 철학박사학위(Dr. phil.)가 수여되었고 단지 법학부와 결합된 대학에서만 경제학박사학위(Dr. rer. pol.)가 수여되었다.

19세기에도 경제학의 완전한 자립은 성취되지 않았고 관방학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었지만, 19세기 중엽이후 역사학과에 의해 독일내의 거의 모든 경제학강좌가 점유되기까지의 국경제학의 소개와 독창적 기여가 병행하였다. 크라우스(Christian Jacob Kraus, 1753~1807)는 그의 책 『국가경제』(Staatwirtschaft, 1807)를 통해 스미드의 경제이론을 소개하였고, 자

(15) Winkel (1982, p.416)의 다음 글 참조: "Obwohl schon 1778 erstmals gebraucht, wurde jetzt von v. Jacob und Friedrich Julius Heinrich v. Soden (1754~1831) gleichzeitig 1805 der Ausdruck "Nationalökonomie" verwendet. Gottfried Hufeland(1760~1817) führte dann den Begriff "Volkswirtschaftslehre" ein."

유주의적 경제사상의 신봉자인 라우(Karl Heinrich Rau, 1792~1870)도 그의 저서 『정치경제학교과서』(*Lehrbuch der politischen Ökonomie*, 1826)에서 오늘날까지 통용되는 경제학의 합리적 구분을 시도하여 관방학과의 결별을 가능케 하였다.⁽¹⁶⁾ 이외에도 튀넨(Johann Heinrich von Thünen, 1783~1850)의 立地論과 망골트(Hans Karl Emil von Mangoldt, 1824~1868)의 기업이윤분석은 경제학의 발전에 대한 독창적 기여라고 할 수 있다.

3. 마르크스의 科學的 社會主義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경제학의 발전과정에서 최초의 커다란 논쟁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이론을 둘러싸고 벌어진 것이었다. 마르크스는 철학, 역사학, 사회학, 경제학을 포괄하는 思想體系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쳤지만 경제학의 발전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다[Leontief (1938, pp. 1-9); Alexander (1939~1940, pp. 123-35)]. 마르크스의 이론은 위에서 지적한 스미드와 리카도문제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은 당시의 사회문제(soziale Frage) 또는 노동자문제(Arbeiterfrage)를 직접적 계기로 하여 성립된 것이다[Jochimsen und Knobel (1971, pp. 19-20)].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이론이 국민경제학에서 커다란 논쟁으로 발전한 이유는 그것이 1세기 가량 축적되어 온 고전경제학의 연구성과를 일거에 無用之物로 置簿해 버렸기 때문이었다. 고전경제학에 있어서 생산수단의 私有와 조정원칙으로서의 시장에서의 자유경쟁 그리고 경제적 개인주의와 정부간섭의 최소화 즉 자유방임을 바탕으로한 경제질서는 자연적인 것으로서 다른 질서로 대체될 수 없는 것이었다. 마르크스는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형성원리에서 경제력집중과 근로대중의 빈곤화 및 노자대립 그리고 나아가서는 바로 그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붕괴를 야기시키는 원인을 찾아 내었다고 믿었다. 이러한 견해는 당시의 경제학자들에게는 갈릴레이의 地動說만큼이나 혁명적인 것이었다.⁽¹⁷⁾

헤겔(G.W.F. Hegel, 1770~1831)의 변증법과 리카도의 노동가치설, 그리고 케네(F. Quesnay, 1694~1774)의 經濟表를 연결시켜 태어난 마르크스의 이론은 생산기술과 경제, 그리고 사회를 전체적으로 묶은 자본주의체제의 一般理論이라고 할 수 있다[Beckerath (1965, pp. 288-304 특히 pp. 291-2); Orzech and Groll (1989, pp. 57-76 특히 p. 72)]. 그의 경제분석은 歷史的 唯物主義(historischer Materialismus)에 따라 물질적 생산으로부터 시작되어 교환, 분배, 소비에 이르는 순환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순환적 분석방법은 케네가 사용한 이후 거의 잊혀졌던 것으로서 마르크스에 의해 재활용된 후 케인즈에게 전수되었다.

(16) 라우는 경제학을 경제이론, 경제정책 그리고 제정학으로 구분하였다.

(17) 사회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둘러싼 각 학파의 논쟁에 관해서는 Müssiggang (1968) 참조.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의 이론이 독일적 특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더라도 그가 어떠한 전제에서 출발하여 이론을 구축하고 있는지는 분명하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현실에 입각하여 전체성과 변증법적 변화 또는 개혁을 강조한 데서 찾을 수 있다.

4. 방법론논쟁

방법론논쟁은 멩거와 슈몰러사이에 벌어진 논쟁이었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한계효용학과 (Grenznutzenschule)와 일찌기 사회정책학회(Verein für Sozialpolitik)를 세운 후기역사학과(jüngere Historische Schule)사이의 논쟁이었고 나아가서는 1880년대를 전후한 유럽 知性界의 양대 潮流가 충돌하면서 나타난 시대적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¹⁸⁾ 객관적 가치론 즉 노동가치론을 중심으로 한 고전경제학이 그 권위와 독창성에 대한 신뢰를 점차 상실해 가고 있을 때 독일, 영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경제학설사상 유례가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 것이 주관적 가치론을 바탕으로 이른바 「限界革命」을 이룩한 한계효용학과였다.

당시에는 고전경제학 뿐만 아니라 계몽사상이 심어 준 理性(Vernunft)에 대한 확신도 점점 퇴색해 가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사조의 영향으로 역사학과, 특히 후기역사학과에 속한 국민경제학자들은 이론적 보편성보다는 역사적 구체성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독일에서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한계효용이론이 승리를 구가하고 있을 때 독일에서는 방법론논쟁으로 이어졌다. 화해하지 못하고 한 세대 이상 지속된 논쟁의 여파는 대학교수의 임용에까지 미쳤다. 그리고 논쟁은 의형상 멩거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한동안 슈몰러는 독일경제학발전을 저해한 학자로 지탄받기도 하였다.

논쟁의 핵심은 이론과 방법에 있었다. 역사학파들의 이론적대성(Theoriefeindlichkeit)과 한계효용학파들의 결여된 사실탐구(Tatsachenforschung)가 첫째 문제였고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의 상대적 우월성이 다음 문제였다. 이론과 사실탐구의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흔히 주장되고 있는 바와는 달리, 어느 한쪽만을 일방적으로 고집하거나 다른 쪽을 부정한 적이 없었다. 다만 이론을 통해 포착하려는 경제현상의 성격을 보는 눈이 달랐을 뿐이었다. 즉 딜타이(W. Dilthey, 1833~1911)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은 슈몰러는, 자기의 학파를 역사학파가 아닌 역사·윤리학과라고 부른 데서도 나타나듯이, 경제현상의 역사적·사실적 성격을 총체적 사회맥락속에서 파악하고자 시도한 반면[Schumpeter (1954,

(18) Beckerath (1965, pp.295-6)에서 이에 관한 적절한 서술을 찾을 수 있다.

pp. 811-3)], 멩거에게는 先驗的·分析的(apriorisch-analytisch)인 경제논리의 규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였다.

귀납과 연역의 문제에 있어서는 멩거가 실험적·연역적 이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슈몰러는 실험적 연역을 통한 성급한 일반화를 지양하고 경험적 검증을 통해 점진적으로 일반법칙을 획득할 것을 주장하였다. 「역사적 방법」(historische Methode)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슈몰러의 이러한 견해는 오늘날의 科學理論에 더욱 잘 부합되는 것으로 판명되어 경제학 발전에 기여한 그의 공로를 재평가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¹⁹⁾ 그러나 이것이 방법론논쟁의 완결을 뜻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5. 가치판단논쟁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곧바로 시작된 가치판단논쟁은 19세기 말엽에 있었던 前期 방법론논쟁과는 달리 사회정책 학회내부의 新舊世代間의 인식론적 갈등이 표출된 것이었다. 역사학과의 젊은 비판적 세대에 속하는 베버와 쾰바르트(Werner Sombart, 1863~1941)는 講壇社會主義(Kathedersozialismus)를 대표하는 역사학과의 중진들, 즉 슈몰러, 바그너(Adolph Wagner, 1835~1917), 크납(G.F. Knapp, 1842~1926) 등과 사회과학연구의 객관성에 관한 논쟁에 불을 붙였다. “국민경제학이 과연 과학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정점에 이른 논쟁에서 [Aldrup (1982, pp. 659-66 특히 p. 659); von Ferber (1976, pp. 165-80)] 베버는 사회과학의 연구와 교육을 위해 가치자유원칙(Wertfreiheitsprinzip)을 천명하였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치자유는 의미는 오늘날까지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²⁰⁾ 그로부터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져 온 것만은 사실이다.

딜타이의 영향을 역시 강하게 받았던 베버는, 사회과학적 인식의 방법으로 자연과학적 「설명 방법」(Methode des Erklärens)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 방법」(Methode des Verstehens)의 우월성을 기본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다. 단지 딜타이의 감정적, 형이상학적 해석학을 해석학자들이 도의시켰던 이성을 통해 淨化시키려는 것이 가치판단논쟁에 입하는 베버의 기본적 의도였다. 결국 경제학의 장래를 위해 합리적 思考로의 회귀를 원하는 시대적 소망의 표현이 가치자유(Wertfreiheit)로 되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²¹⁾

(19) 초기에 슈몰러의 열렬한 반대자였던 슈메터(1971, pp. 118-32)는 이미 1926년에 그가 주장한 내용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에 대한 견해를 수정하였다.

(20) Aldrup (1982, pp. 661-2)의 다음 글 참조: “In der Tat: Max Weber hat sehr viel Sorgfalt und dennoch vergebliche Mühe darauf verwandt, Sozialphilosophen und-wissenschaftlern den ‘Sinn der Wertfreiheit’ deutlich zu machen.”

(21) J.A. Schumpeter (1954, pp. 804-5) 참조. 베버(1973, p. 171)의 인식론적 기본입장은 다음과 같다: “Alle denkende Erkenntnis der unendlichen Wirklichkeit durch den endlichen Menschengestalt beruht daher auf der stillschweigenden Voraussetzung, daß jeweils nur

가치자유의 원칙에 따르면, 경험과학으로서의 사회과학에서는 개별적 사회현상의 합리적 이해만이 가능할 뿐 규범적 명제의 도출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사회과학자들의 합리적 자기절제(Selbstbescheidung)가 강력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주장을 둘러싼 논쟁은 60년대의 실증주의논쟁(Postivismusstreit)을 거쳐 혁명과 개혁의 당위를 주장하는 최근의 논쟁으로까지 이어졌으나 [Marcuse und Popper (1976)]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가치자유의 원칙에 동조한다 하더라도 그 실천에 상당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²²⁾

가치판단논쟁이 결과적으로 원점을 맴돌고 있기 때문에 논쟁의 無用論에 좋은 근거를 제공해 주고는 있으나 그것이 경제학의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다. 가치판단논쟁이 지식사회학의 발전을 촉진시켜 경제이론의 실증적 外樣 속에 숨겨져 있는 규범적 요소에 대해 관심을 환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치 및 규범과 무관할 수 없는 경제정책의 수립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규범경제학의 체계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제고시켰기 때문이다.

6. 1차대전 前後의 改革論議

방법론논쟁과 가치판단논쟁이 이어지고 있었을 때에도 사회정책학회는 國家學교육의 개혁에 관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과과정의 정비 등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경제학 이수자들에게 Diplom학위가 수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학은 법학교육의 보조역할에 그쳤고 교육목표도 여전히 고급관료의 양성에 있었다. 박사학위는 취득할 수 있었지만 이것도 학생수의 증가로 그 질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1907년 예나(Jena)대학이 최초로 Diplom시험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차대전이 끝난 직후 경제학을 공부하려는 학생수가 급증하였다.⁽²³⁾ 따라서 18세기 중엽 이후 두번째로 경제학은 유행과학(Modewissenschaft)이 되었고 다시 개혁논의가 시작되었다. 개혁의 초점은 첫째가 Diplom학위의 도입, 둘째가 당시 독립된 학과로 성장한 경영학

ein endlicher Teil derselben den Gegenstand wissenschaftlicher Erfassung bilden, daß nur er "wesentlich" im Sinne von "wissenswert" sein solle."

(22) 여기에 관해 두 사람의 견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This implicit belief in the existence of a body of scientific knowledge acquired independently of all valuations is, as I now see it, naïve empiricism...I have therefore arrived at the belief in the necessity of working always, from beginning to the end, with explicit value premises." [Myrdal (1969, pp.vii-viii)];

"Wir können dem Wissenschaftler nicht seine Parteilichkeit rauben, ohne ihm auch seine Menschlichkeit zu rauben...Der objektive und der wertfreie Wissenschaftler ist nicht der ideale Wissenschaftler. Ohne Leidenschaft geht es nicht, und schon gar nicht in der reinen Wissenschaft." [Popper (1969, p.114)].

(23) 1919/20의 겨울학기예 등록된 학생수는 베를린대학 1,660명, 프랑크푸르트대학 1,600명, 그리고 뮌헨대학이 1,250명이었다.

(Privatwirtschaftslehre 또는 Betriebswirtschaftslehre)과의 통합, 그리고 세계가 강의요강과 교과과정의 통일에 관한 것 등이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뉘른베르크(Nürnberg)대학의 전례에 따라 경제학과와 기타 관련학파들이 경제·사회과학부(WISO Fakultät)에 통합되기 시작하였다. 1920년 법학 이외의 학과이수자들도 상응하는 조건을 갖췄을 경우 고급관료가 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자 곧바로 Diplom-Volkswirt(경제학석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합의하고, 1922년 튀빙겐대학에서 최초로 Diplom시험규정이 발표되었다. 이어서 Diplom-Sozialwirt, Diplom-Ökonom, Dipom-Handelslehrer, Diplom-Kaufmann 등의 학위가 수여되기 시작하였다. 대학의 자율이 보장되고 있는 독일에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923년 문교부장관회의에서 결정한 경제학 Diplom의 시험과목은 일반경제학, 특수경제학, 제정학, 통계학, 公法, 민법총론 그리고 선택과목 등이었다. 선택과목에는 경제사, 경제지리, 사회복지론, 보험론, 노동법, 그리고 工學 등이 있었으나 학부에 따라 대체되거나 보완될 수도 있었다. 교과내용이 통일적으로 구체화된 이때부터 현대적 의미의 경제학교육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학의 연구도 방법론논쟁의 여파에서 벗어나 이론적 탐구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7. 國家社會主義體制下의 桎梏

영국에서는 케인즈혁명이 준비되고 있을 때 독일에서는 경제학의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암흑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지속된 국가사회주의(Nationalsozialismus)체제의 지배는 독일경제학을 세계로부터 고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연구인력의 상실과 연구의욕의 감퇴를 초래하였다. 경제학은 점차 이데올로기화, 정치화되고 연구의 본령에서는 멀어져 갔다. 다시 불붙기 시작하던 이론적 탐구도 식어갔다.

30년대 초엽에 일기 시작한 거대한 정치적 변혁은 그(W. Eucken)로 하여금, 그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지 않던 문제, 즉 理論과 歷史와의 관계에 다시금 관심을 기울이도록 작용하였다. 경제적 현실은 오로지 정치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고, 경제적 진행과정은 국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하지 않은가? 경제학적 이론은 거기에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창백하고 추상적인 연역을 통해 이론은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데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가? 수많은 젊은 경제학자들이 이론으로부터 등을 돌린 것은 사실 놀랄만한 일이 아니었다[Lutz (1959, p.193)].

이 기간에도 통일적 교과과정과 시험규정의 실시 등 제도적 정비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통치목적에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들이었다. 경제학의 국가학적 성격이 다시 강조되고 학생들에게는 국가사회주의적 기본관점에서 경제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정치·역사적 소양교육이 강화되었다. 대학에 입학해서 최초의 두학기 동안에는 역사, 민족, 그리고 국가에 관한 강의를 주로 들어야만 했다.

당시의 경제전공 Diplom시험과목은 다섯개의 필수과목, 즉 경제이론, 경제정책, 재정학, 경영학, 법학과 하나의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1938년부터는 박사학위과정을 통일시켜 학위도 경제학이 속해 있는 학부의 성격에 관계없이 Dr. rer. pol.만 수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독일경제학의 연구와 교육은 해방의 날만을 기다리는 형편에 있었다.

8. 1945년 이후의 發展傾向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독일경제학이 맞은 상황은 1차대전직후와 유사했다. 무엇보다도 학생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곧바로 집중적인 개혁논의가 시작된 점에서 그러하다. 개혁의 핵심문제는 학생수의 폭증과 교육내용의 질적 변화에 제도적으로 대처하는 일이었지만 그외에 1933년 이래 계속 벌어져 온 세계경제학수준과의 격차를 줄이는 일도 큰 과제였다. 학생수의 증가는 대체로 전후의 경제복구에 따른 인력수요의 증가와 경제학과의 현대화에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 그리고 법학뿐만 아니라 경제학을 공부한 학생에게도 행정관료가 될 수 있는 동일한 자격을 부여한 1953년의 「공무원법」이 이에 가세하였다.

1950년대 말경까지 英美의 발전된 경제학을 도입하는 작업이 서서히 진행되었다. 1950년 파울센(A. Paulsen)은 그의 저서 『新經濟學』(Neue Wirtschaftslehre)을 통해 케인즈의 경제이론을 독일에 소개하였으며, 이때를 전후하여 경제학의 數學化도 병행되었다. 생산요소에 관한 단순한 이론들 대신에 성장론, 분배론, 화폐·금융론, 계량경제학, 경기변동론 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組合論, 財政學史와 같이 전통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받던 학과목은 점차 중요성을 상실하고 폐지되거나 선택과목으로 전락되어 갔다.

이러한 변화가 가속되면서 1960년대 말경에 경제학교육의 근본적 개혁이 다시 수행되었다. 1968년 4월의 총장회의(Rektorenkonferenz)와, 같은 해 6월의 문교부장관회의에서 통과된 「외과시험규정」(Rahmenprüfungsordnung)에 맞춰 각 학부의 시험규정이 조정되고 곧 이어 교육내용의 적용이 뒤를 따랐다. 이때 새로워진 것으로는 첫째로 중간시험(Zwischenprüfung)의 도입을 꼽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기초과정(Grundstudium)과 전문과정(Hauptstudium)의 분리를 들 수 있다. 기초과정은 흔히 경제학과 경영학 구분없이 공통으로 이수되며 주로 전공학습에 필요한 道具的 知識과 연구방법론 등이 강의된다. 4학기의 기초과정을 끝내고 중간시험에 합격하면 전문과정에 들어 갈 수 있다. 기초과정의 강의를 대체로 필수인데 반해 전문과정에서는 선택과목과 등록학기 등과 관련하여 최대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학생수의 累增에 대처하고 교육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수학년한의 제한이 도입되고 있어 전문과정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8학기가 지나면 Diplom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 시험과목은 4과목의 필수, 즉 경제이론, 경제정책, 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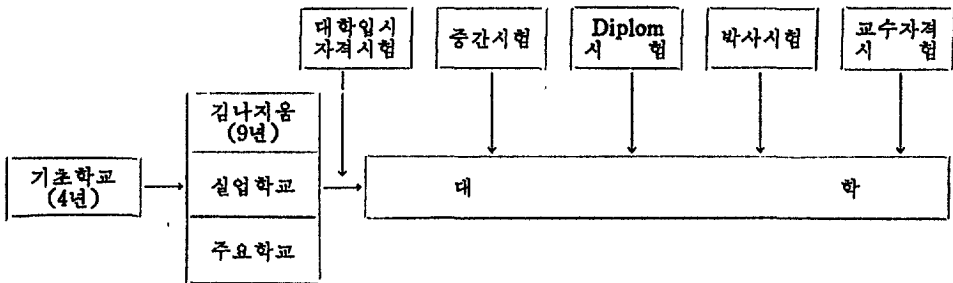
학, 일반경영학과 하나의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다.

의과규정에 의해 경제학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일반화가 어느 정도 이뤄지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독일대학에는 전통과 학부, 그리고 교수개인의 성향에 따라 많은 특성들이 남아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관한 개혁논의는 1968년 이후로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戰後의 발전경향을 간단히 종합적으로 요약할 수는 없지만, 금세기 초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발전경향, 즉 美國化의 경향만은 분명한 듯하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독일적인 것」으로부터의 이탈을 뜻하기도 한다. (24)

IV. 研究와 教育現況

독일은 연방공화국으로서 지방자치제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에 관한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주정부에서 수립하고 실천에 옮긴다. 따라서 주정부마다 학제운영이 다소 相異하지만 대체로 <그림 3>과 같은 기본골격에는 변함이 없다.

현재 독일에서는 34개의 대학(Universität)과 40개의 전문대학(Fachhochschule), 그리고 6개의 통합대학(Gesamthochschule)에서 경제학을 전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대학에서는 학위취득은 가능하지만 학문적 연구는 인적, 물적 여건상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수는 오늘날 대략 80,000명에 이르고 Diplom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평균기간은 수학년한을 제한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초에는 대략 9학기였다가 70년대 초에 11학기로 늘고 1989년 현재에는 14학기로 유럽에서 가장 긴 편에 속한다. (25)



<그림 3> 독일학제의 기본골격과 시험제도

(24) Weber(1973, pp.584-5)의 다음 글 참조. "Nun können wir bei uns mit Deutlichkeit beobachten: daß die neueste Entwicklung des Universitätswesens auf breiten Gebieten der Wissenschaft in der Richtung des amerikanischen verläuft...Aber der "Geist," der in ihnen herrscht, ist ein anderer als die althistorische Atmosphäre der deutschen Universitäten."

(25) 최근의 수치는 1989년 7월 26일자 *Kölnische Rundschau* 참조.

경제학의 실질적 연구는 대학의 경제학부와 부설연구소, 그리고 대학과 관련을 맺고 있거나 독립적인 기타 연구소에서 수행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이 학생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교육에 치중하게 되는 만큼 연구소의 연구활동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연구소들을 몇 개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²⁶⁾

Institut für Weltwirtschaft an der Universität Kiel (Kiel, 1914)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Berlin, 1925)

Ifo-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München, 1949)

Rheinisch-Westfäli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Essen, 1943)

Hamburgisches Welt-Wirtschafts-Archiv (Hamburg, 1908)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öln, 1951)

Wirtschafts-und Sozialwissenschaftliches Institut des DGB (Düsseldorf, 1946)

Institut für Mittelstandsforschung (Köln, 1958)

오늘날 경제, 그리고 사회정책적 결정은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과학적 기초연구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분야의 세분화와 연구물의 가속적 축적은 사회전체 또는 경제학전반을 조감할 기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의 자료가 되는 기초연구도 단편적일 경우가 많다. 이러한 편협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학의 사회공학적 발전을 경계하고 경제학의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인접분야와의 상호연계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려는 시도, 즉 철학을 경제학에 다시 도입하려는 시도가 활발한 것도 독일적 전통속의 한 팔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V. 맺 음 말

지금까지 독일경제학연구와 교육의 발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머리말에서 이미 결론적으로 서술한 바와 같이 독일경제학은 그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관념론적 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현실 속에서의 경제현상을 그것 자체로서 독립된 인식대상으로서보다는 사회의 총체적 구조속에서 역사적·해석학적 방법을 통하여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학이 최근까지 오랫동안 철학부의 한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특성이 다른 한편으로는 잦은 논쟁을 야기시켜 방법론적인 방향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나 역사와 이론, 그리고 전체와 부분 사이의 관계에 대해 끊임없

(26) 팔호안은 소재지와 설립년도임.

이 성찰하게 한 점은 충분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戰後에 세계경제학과의 재결합이 이뤄지면서 독일경제학의 이러한 전통적 특성은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점차 工業化되어 가는 경제학의 일반적 현황을 놓고 볼 때, 독일경제학이 독일적 특성을 살려 세계경제학에 기여해야 할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한 실마리를 멩거와 슈몰러의 방법을 종합하여 역사와 이론, 그리고 경제학과 인접과학과의 올바른 관계정립을 시도한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us)의 대표자 오이켄(Walter Eucken, 1891~1950)의 업적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에게서 경제학의 발전과정에서 있었던 시련은 꼭 좌절만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확신을 얻을 수도 있다.

포퍼(1976, p.31)는 「이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이론은 ‘세계’를 잡아 들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설명하고 그리고 지배하기 위해 우리들이 집어 던지는 그물이다. 그 그물코를 점점 작게 만드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그 일은 쉽사리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닌 듯하다.⁽²⁷⁾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역사속에서 실증적으로 잘 보여주는 좋은 예가 바로 독일경제학의 연구와 교육의 발전과정이라고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 Albert, H., "Modell-Platonismus. Der neoklassische Stil des ökonomischen Denkens in kritischer Beleuchtung", in F. Karrenberg und Hans Albert (Hrsg.), *Sozialwissenschaft und Gesellschaftsgestaltung. Festschrift für Gerhard Weisser*, Berlin, 1963:45-76.
- Aldrup, D., "Werturteilsstreit", in *Handwörterbuch der Wirtschaftswissenschaft(HdWW)*, Bd. 8, Stuttgart-New York-Tübingen, 1982:659-66.
- Alexander, S.S., "Mr. Keynes and Mr. Marx",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7, 1939-1940:123-135.
- Beckerath, E.V. "Wirtschaftswissenschaft: Methodenlehre", in *Handwörterbuch der Sozialwissenschaften(HDSW)*, Bd. 12, Stuttgart-Tübingen-Göttingen, 1965:288-304.
- Bell, D. and Kristol, I. (eds.), *The Crisis in Economic Theory*, New York, 1981.

(27) John Hicks (1979, p.9)의 다음 글 참조. "Economics...has been committed...to the search for 'laws', or generalizations, on the basis of which we can assert something about the causes of events. It is a search which in the case of economics is most obviously never-ending; for economics...is a characteristically imperfect science."

- Brodbeck, M. (ed.),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s*, New York, 1968.
- Buchanan, J.M. *What Should Economists Do?*, Indianapolis, 1979.
- Eucken, W., *Grundlagen der Nationalökonomie*, Jena, 1940.
- _____, *Grundsätze der Wirtschaftspolitik*, Tübingen, 1959.
- von Ferber, C., "Der Werturteilsstreit 1909/1959" in E. Topitsch(Hrsg.), *Logik der Sozialwissenschaften*, 1976:165-80.
- Friedman, M., "The Methodology of Positive Economics", in W. Breit and H.M. Hochman(eds.) *Readings in Macroeconomics*(2nd ed.), Hinsdale, 1971:23-47.
- Gareau, F.H., "The Multinational Version of Social Science", *Current Sociology*, Vol. 33, No. 3, 1985:1-169.
- Hicks, J., *Causality in Economics*, New York, 1979.
- Homans, G.C., *The Nature of Social Sciences*, New York, 1967.
- Hutchison, T.W., "Theoretische Ökonomie als Sprachsystem," in H. Albert(Hrsg.), *Theorie und Realität*, 1972:191-202.
- Jochimsen, R., und Knobel, H., "Zum Gegenstand und zur Methodik der Nationalökonomie", in R. Jochimsen und H. Knobel(Hrsg.) *Gegenstand und Methoden der Nationalökonomie*, Köln, 1971.
- Kindleberger, C.P., "International Public Goods without International Govern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6, 1986:1-13.
- Knapp, P., "Can Social Theory Escape from History? Views of History in Social Science", *History and Theory—Studies in the Philosophy of History*, Vol. 23, 1984:34-52.
- Koslowski, P., *Ethik des Kapitalismus*, Tübingen, 1986.
- Leontief, W.W., "The Significance of Marxian Economics for Present-Day Economic Theory",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Vol. 28, 1938:1-9.
- Lutz, F.A., "Walter Euckens Beitrag zur Nationalökonomie—Die Idee der Wirtschaftsordnung", in W. Eucken, *Grundsätze der Wirtschaftspolitik*, 1959:191-5.
- Marcuse, H., und Popper, K., *Revolution oder Reform?*, 4. Auflage, München, 1976.
- Massey, G.J., "Professor Samuelson on Theory and Realism: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5, 1965:1155-64.
- Müssiggang, A., *Die soziale Frage in der historischen Schule der deutschen National-*

- ökonomie*, Tübingen, 1968.
- Myrdal, G., *The Political Element in the Development of Economic Theory*, New York, 1969.
- Nagel, E., "Probleme der Begriffs- und Theoriebildung in den Sozialwissenschaften", in Hans Albert (Hrsg.), *Theorie und Realität*, 2. Auflage, Tübingen, 1972:67-85.
- Orzech, Ze'ev B. and Groll, S., "Stages in the development of Marxian concept: the composition of capital",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Vol. 21, 1989:57-76.
- Popper, K.R., "Die Logik der Sozialwissenschaften," in Th.W. Adorno u.a., *Der Positivismusstreit in der deutschen Soziologie*, Darmstadt, 1969.
- _____, *Logik der Forschung*, 6. Auflage, Tübingen, 1976.
- Preiser, E., *Nationalökonomie heute*, 12. Auflage, München, 1975.
- Rickman, H.P., "Geisteswissenschaften," in: Paul Edwards(ed.),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New York-London, 1967:275-9.
- Robinson, J., *Economic Philosophy*, Harmondsworth, 1962.
- Samuelson, P.A., "Economists and the History of Idea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2, 1962:1-18.
- Schmölders, G., "Wirtschaftswissenschaft, III. Theorienbildung in der Volkswirtschaftslehre, Geschichte", in *HdWW*, Bd. 9:425-46.
- _____, *Geschichte der Volkswirtschaftslehre*, Wiesbaden, 1961.
- Schumpeter, J.A.,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London, 1954.
- _____, "Gustav v. Schmoller und die Probleme von heute," in R. Jochimsen und H. Knobel (Hrsg.), *Gegenstand und Methoden der Nationalökonomie*, 1971:118-32.
- Surányi-Unger, Theo, "Forschung und Lehre, (I) Einzeldisziplinen, (2) Wirtschaftswissenschaft, in *HDSW*, Bd. 4, 1965:21-37.
- Sztompka, P., *Sociological Dilemmas, Toward a Dialectic Paradigm*, New York-London, 1979.
- Topitsch, E.(Hrsg.), *Logik der Sozialwissenschaften*, 9. Auflage, Köln, 1976.
- Weber, M., "Die "Objektivität" sozialwissenschaftlicher und sozial-politischer Erkenntnis," in M. Weber, *Gesammelte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 4. Auflage, Tübingen, 1973:146-214.

Weber, M., "Wissenschaft als Beruf", in M. Weber, *Gesammelte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 1973:582-613.

Wicksell, K., *Lectures on Political Economy*, Reprints of Economic Classics, New York, 1967.

Winkel, H., "Wirtschaftswissenschaft, I: Geschichte", in *HdWW*, Bd. 9, 1982:413-25.

〈討 論〉

劉壬洙教授*의 論評

우리나라 대학에서 經濟學의 研究와 教育이 실시된 것도 이미 오래 전부터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외국의 經濟學理論과 研究方法이 별다른 비판없이 도입되어 교육하게 되었다. 때문에 경제학의 연구나 교육은 역사적·세계적 안목과 뚜렷한 가치관이 마련되지 못하여 특수한 우리 경제 현실을 설명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다. 따라서 경제현실을 대변할 수 있는 韓國的 經濟學의 定立方向을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 개별국가들의 경제학 설립배경과 그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박교수의 「獨逸의 經濟學 研究와 教育」이라는 논문은 한국적 경제학의 정립작업을 전체적으로 전개하는데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 논문의 주제내용은 獨逸的인 國民經濟學의 設立背景과 內容을 재조명했는데 당시 영국에 비해 1세기 늦은 독일의 産業化를 달성할 수 있었던 길을 설명했다. 즉 독일경제학이 철저히 국가를 위주로 했고 實踐的이며 倫理的인 面을 강조했다라는 것이다. 이는 역사주의적이고 국민주의적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독일경제학을 분석하여 새로운 체계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은 이 논문이 경제학의 연구와 교육방법에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박교수의 논문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獨逸經濟學의 근저를 이루는 歷史學派는 그 정신적인 뿌리를 계몽주의적이고 낭만주의적인 경제관, 즉 국가가 유기체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에서 출발한 역사학파는 독일의 資本主義 展開過程과 發展樣相이 밀접한 관계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제학의 연구내용이 시대적 요구사항에 따라 변화되었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독일경제학이 경제학 이론발전에 기여보다는 實踐的이고 政策的인데 치중했다는 사실은 無理論的이라는 批判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역사학파의 발전이론은 그럼에도 무시되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역사학파는 독일국가 위주적인 입장을 대변하므로 30년대 쏘

* 梨花女子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體主義的 統制經濟의 당위성을 제공하는데 정신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그후 전후에도 독일경제학은 社會的 市場經濟라는 특이한 경제질서를 갖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세계, 국민경제학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研究對象과 教育內容으로 실천에 대한 올바른 경제학 교육의 논리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학 교육은 市民社會的이고 普遍的으로 가야 하며 교육내용은 보다 均衡的이고 體系的이어야 한다. 또한 교과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고전적인 제이론을 근본으로 해야 하며 변화되는 고도산업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학 교육은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한 전문인재 양성에 있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국민전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이다.